

의안번호	2208938
의 퇴 인	허성무의원
회 답 일	2025.4.30.
추 계 번호	25D155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44억 7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722억 9,900만원 (연평균 144억 6,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기후에너지부 신설	14,407	14,032	14,320	14,618	14,923	72,299	14,460

주: 본 추계 결과는 증원인원 및 청사 규모 등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증원인원 및 청사 규모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6조(행정각부)제20호 및 안 제46조(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기후에너지부장관이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6조(행정각부) 제20호 및 안 제46조 (기후에너지부) 신설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기후에너지부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 조직의 구성·운영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기후에너지부의 정원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직제를 마련하게 되므로 현 시점에서 기후에너지부의 정원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움
 - 임차료의 경우도 기후에너지부의 정원규모, 위치가 확정된 후 규모에 따라 임차나 청사 신축 등의 방식이 정해지므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비용을 추정하기 어려움
 - 본 추계에서는 타 부처에서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기후에너지부로 전입된다고 가정하고, 장관 1명과 차관 1명 및 기획·인사·감사·계약 등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타 부처에서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452명으로, 전입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은 기존 부처의 예산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
- [참고 1] 각 부처의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 업무 담당 기구 및 정원 현황
[참고 2] 행정각부 본부 정원 현황
- 기획, 인사, 감사, 계약 등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규모는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와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의 행정지원조직¹⁾ 비율을 준용하여 130명을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음

[표 2] 기후에너지부 행정지원조직 정원 배정(안)

(단위: 명)

고위 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5	4	15	27	49	23	5	2	130

주: 환경부 행정지원조직의 직급별 정원 비율에 맞추어 배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후에너지부 사무실은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기후에너지부의 증원인원에 대한 자산취득비와 임차료를 추계
- 공무원 보수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 기관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망치를 적용²⁾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법안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인건비(보수 및 기관부담금)

- (장관 및 차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장관의 연봉액은 1억 4,969만원, 차관의 연봉액은 1억 4,538만원

1) 환경부 행정지원조직 인원

(단위: 명)

장관실	차관실	대변인실	감사관실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	계
6	3	14	36	61	22	142

주: 장관 정책보좌관 포함

자료: 환경부

2)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 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2025.4.)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2.4
기관부담금 요율(%)	13.066	13.130	13.194	13.286	13.380
1인당 자산취득비(천원)	4,981	5,080	5,182	5,285	5,391
소비자 물가상승률(%)	2.0	2.0	2.0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으로 연봉액에 각종 수당을 합산

[표 3] 장관 및 차관 보수

(단위: 천원)

구분	연봉액	연봉 외 급여				합 계
		소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장관	149,692	17,040	14,880	1,680	480	166,732
차관	145,378	13,560	11,400	1,680	480	158,938

주: 각종 수당 중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1인만 적용하고,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자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행정지원조직 보수) 2025년 환경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공무원 평균 연봉액을 준용하고 수당을 합산하여 1인당 보수를 산출

[표 4] 행정지원조직 1인당 보수

(단위: 천원)

구 분	연봉액	연봉 외 급여				합 계
		소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고위공무원	141,541	9,960	7,800	1,680	480	151,501
3급	117,655	8,160	6,000	1,680	480	125,815
4급	97,576	6,960	4,800	1,680	480	104,536
5급	73,392	5,160	3,000	1,680	480	78,552
6급	60,469	4,380	2,220	1,680	480	64,849
7급	43,617	4,320	2,160	1,680	480	47,937
8급	37,715	4,260	2,100	1,680	480	41,975
9급	34,824	4,260	2,100	1,680	480	39,084

주: 1. 호봉제 급여 대상자(6급 이하)의 연봉액에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을 포함함
 2. 각종 수당 중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1인만 적용하고,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3. 고위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2025년도 환경부 예산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보수 총액) 추계의 전제에 따라 장관 1명, 차관 1명, 행정지원인력 130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1인당 보수를 곱하여 총 보수를 산출

[표 5] 보수 총액: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보수 총액 (=직급별 1인당 보수×인원)	장관	1명	170	173	177	180	184	885
	차관	1명	162	165	169	172	175	844
	고위공무원	5명	773	788	804	820	836	4,021
	3급	4명	513	524	534	545	556	2,671
	4급	15명	1,599	1,631	1,664	1,697	1,731	8,323
	5급	27명	2,163	2,207	2,251	2,296	2,342	11,258
	6급	49명	3,241	3,306	3,372	3,440	3,508	16,867
	7급	23명	1,125	1,147	1,170	1,193	1,217	5,852
	8급	5명	214	218	223	227	232	1,114
	9급	2명	80	81	83	85	86	415
합계		132명	10,040	10,241	10,446	10,655	10,868	52,251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은 보수 총액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연도별 기관부담금요율을 적용

[표 6] 기관부담금: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기관부담금	1,312	1,345	1,378	1,416	1,454	6,90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기후환경부의 인건비(보수, 기관부담금)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91억 5,500만원으로 추계

[표 7] 인건비(보수 및 기관부담금):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보수	10,040	10,241	10,446	10,655	10,868	52,251
기관부담금	1,312	1,345	1,378	1,416	1,454	6,905
합계	11,352	11,586	11,824	12,071	12,322	59,155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기본경비

- 2025년도 환경부 예산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17.2%³⁾를 앞서 추정된 인건비 총액에 적용하여 기본경비 산출
- 추계 결과, 기본경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01억 7,500만원으로 추계

[표 8] 기본경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기본경비	1,953	1,993	2,034	2,076	2,119	10,175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자산취득비

- 증원인원에 대한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해인 2026년 1인당 498만원으로 가정
 - 국회예산정책처 정부부처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을 활용
- 추계 결과, 자산취득비는 2026년에만 발생하며 6억 5,700만원으로 추계

[표 9] 자산취득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자산취득비	657	-	-	-	-	65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임차료

- 추계의 전제에 따라 기후에너지부 사무공간은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사무공간 등의 임차료 및 관리비를 추계함
 - 전입인원 대부분의 근무지가 세종청사이므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의 청사는 세종시에 두는 것으로 가정하여 증원인원 132명에 대한 임차료와 관리비를 추계하되, 증원인원 132명⁴⁾이 1인당 39m²⁵⁾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3) 환경부 2025년도 예산 중 기본경비를 인건비로 나누어 산출

4) 장관 1명, 차관 1명, 진입 452명, 증원 130명

5)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23년도 연구용역보고서(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관한 조직설립, 운영 단가 현황 연구)」의 기관유형별, 청사유형별 1인당 면적 참고

면적당 월 임차료 4,700원/m²⁶)과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연간 임차료를 산출

- 기후에너지부로 전입되는 인원에 대한 이사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본경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에서 제외
- 관리비는 임차료 대비 관리비 비율을 50%로 가정하여 산출

□ 기후에너지부 사무공간 임차료 및 관리비는 2026년 4억 4,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3억 1,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기후에너지부 임차료 및 관리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임차료	296	302	308	314	321	1,541
관리비	148	151	154	157	160	771
합계	444	453	462	471	481	2,312

주: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44억 7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722억 9,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건비	11,352	11,586	11,824	12,071	12,322	59,155
기본경비	1,953	1,993	2,034	2,076	2,119	10,175
자산취득비	657	-	-	-	-	657
임차료 및 관리비	444	453	462	471	481	2,312
합계	14,407	14,032	14,320	14,618	14,923	72,299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하는 「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의 '상권별 오피스 임대료'(2024년 4분기 기준) 대전지역 참고(세종은 조사에서 제외)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증원인원 및 청사 규모 등 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증원인원 및 청사 규모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

[참고 1] 각 부처의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 업무 담당 기구 및 정원 현황

부처	기구	주요 기능	정원(명)
국무 조정실	1처 5국·관 9과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탄소중립 이행 주요정책 심의·의결) 지원 ▶ 기후변화 대응정책 총괄·조정	32
산업통상 자원부	1차관 1실 6국·관 20과	▶ (에너지) 에너지 정책 기능 전담 : 전력, 재생, 수소, 원전 등, 자원은 제외 ▶ (기후) 산업계 기후대응, 기후관련 통상업무	196
환경부	1관 3과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배출권 거래제 집행·관리 등	38
	1센터 3팀	▶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통계관리 등	23
기획재정부	4과	▶ 기후변화, 배출권거래제 관련 협의 ▶ 기후대응기금 관리·운용 및 정책 수립 ▶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중립 예산 종합·조정 ▶ 녹색기후기금 정책 수립, 기후변화 대외협력	25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과	▶ 기후변화대응기술 관련 중장기계획 수립·추진, 국제협력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추진, 전문인력 양성,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등 ▶ 에너지·자원·환경·기상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목표·추진방향 설정, 예산배분방향 수립, 연구개발계획·연구개발예산 연계 및 검토·조정 등	15
행정안전부	3과	▶ 기후재난 대책 수립·조정 및 사전대비·대응 총괄 ▶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전략 수립, 재난예측 등 ▶ 비정형 재난, 소하천 재난관리 등 기후영향 분석	12
농림축산 식품부	1과	▶ 농식품분야 신·재생 에너지,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사업,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11
보건복지부	1과	▶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건강정책 수립 및 조정	2
국토교통부	3과	▶ 건축·교통·항공 분야 온실가스 감축	6
해양수산부	1팀	▶ 해운·항만·수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6
중소벤처 기업부	1과	▶ 대내외 중소기업 환경변화 분석·대응, 디지털전환 및 녹색전환 지원, 협동조합 및 협회·단체 대응 등	2
산림청	2과	▶ 국제기구(협약) 협상, 양자·다자협력,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 ▶ 해외산림자원개발, REDD+, ODA	19
기상청	1국 4과 2팀	▶ 기후변화 감시, 기후 예측 정보 생산·관리	65
합 계			452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 2] 행정각부 본부 정원 현황

부처명	본부 정원(명)	부처명	본부 정원(명)
통일부	273	문화체육관광부	741
여성가족부	2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91
국가보훈부	333	법무부	792
중소벤처기업부	488	보건복지부	847
해양수산부	599	외교부	935
고용노동부	626	산업통상자원부	957
환경부	632	국토교통부	1,020
농림축산식품부	635	기획재정부	1,087
국방부	671	행정안전부	1,648
교육부	687	—	—

주: 2025년 4월 기준

자료: 각 부처 직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